

2020년도 제4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추경예산개요

1. 세 입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기정 예산 32억 8백만원과 같음.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합 계	3,208	3,208	0	0
일반회계	3,208	3,208	-	-
세외 수입	경상적	73	73	-
	임시적	3,135	3,135	-
보조금	-	-	-	-

2. 세 출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636억원으로 기정 예산 640억 1천 3백만원 대비 0.6% 감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64,951	64,013	63,600	△1,351	△413	△2.1%	△0.6%	
행정관리	소 계	64,951	64,013	63,600	△1,351	△413	△2.1%	△0.6%
	행정운영경비	276	276	276	-	-	-	-
	사업비	64,675	63,737	63,324	△1,351	△413	△2.1%	△0.6%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20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10,086	9,524	9,111	△975	△413	△9.7%	△4.3%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1,283	1,033	833	△450	△200	△35.1%	△19.4%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운영·관리	268	238	218	△50	△20	△18.7%	△8.4%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393	353	328	△65	△25	△16.5%	△7.1%
서울시NPO지원센터 운영	2,493	2,451	2,403	△90	△48	△3.6%	△2%
행정-시민사회-지역 사회 간 사회협약 체결	153	153	133	△20	△20	△13.1%	△13.1%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5,496	5,296	5,196	△300	△100	△5.5%	△1.9%

II. 검토의견

1. 세출예산 검토

- 금번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2억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1억원), “서울시NPO지원센터 운영(4천8백만원)” 사업,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협약 체결(2천만원)” 사업 등6개 사업에 4억 1천 3백만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 현황〉

(단위: 백만원)

세출	총 계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내 용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1,033	833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로 인해 오프라인 사업 추진 불가로 일부 예산 감소조정 <table border="1"> <tr> <td>· 사무관리비(1,022백만원→822백만원)</td> <td>△200</td> </tr> <tr> <td>-오프라인 공론장 개최</td> <td>△100</td> </tr> <tr> <td>· 시민토론</td> <td>△40</td> </tr> <tr> <td>· 서울시가 묻습니다</td> <td>△60</td> </tr> <tr> <td>-시민제안 발굴 등 민주주의서울 추진</td> <td>△100</td> </tr> <tr> <td>· 찾아가는 시민제안 운영</td> <td>△80</td> </tr> <tr> <td>·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td> <td>△20</td> </tr> </table> 	· 사무관리비(1,022백만원→822백만원)	△200	-오프라인 공론장 개최	△100	· 시민토론	△40	· 서울시가 묻습니다	△60	-시민제안 발굴 등 민주주의서울 추진	△100	· 찾아가는 시민제안 운영	△80	·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	△20
· 사무관리비(1,022백만원→822백만원)	△200																		
-오프라인 공론장 개최	△100																		
· 시민토론	△40																		
· 서울시가 묻습니다	△60																		
-시민제안 발굴 등 민주주의서울 추진	△100																		
· 찾아가는 시민제안 운영	△80																		
·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	△20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운영·관리	238	218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로 인해 오프라인 사업 추진 불가로 일부 예산 감소조정 <table border="1"> <tr> <td>· 사무관리비(71백만원→51백만원)</td> <td>△20</td> </tr> <tr> <td>-기관협력사업 참여기관 시민참여플랫폼 활성화 운영지원</td> <td>△20</td> </tr> <tr> <td>·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td> <td>△10</td> </tr> <tr> <td>· 오프라인 공론장 개최</td> <td>△10</td> </tr> </table> 	· 사무관리비(71백만원→51백만원)	△20	-기관협력사업 참여기관 시민참여플랫폼 활성화 운영지원	△20	·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	△10	· 오프라인 공론장 개최	△10						
· 사무관리비(71백만원→51백만원)	△20																		
-기관협력사업 참여기관 시민참여플랫폼 활성화 운영지원	△20																		
·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	△10																		
· 오프라인 공론장 개최	△10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353	328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프라인 사업 추진 불가로 일부 예산 감소조정 														

세출	총 계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159백만원→134백만원) △25 - 협치제도 개선을 위한 진단과 권고과정 운영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론장 운영 △10 · 실태조사 등 조사 용역비 △15
	서울시NPO지원센터 운영	2,451	2,403	△48	<p>○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사업 추진 불가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사업계획 변경으로 민간위탁금 사업비 일부 감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금(2,441백만원→2,393백만원) △48 - 사업비(1,182백만원→1,134백만원)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PO지원박람회 대관비용(온라인 전환) △36 · 활동기술포유지원 사업 취소 △7 · 대외협력사업(불용예산 금액) △5
	행정-시민사회-지역 사회 간 사회협약 체결	153	133	△20	<p>○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협약 민관기구 운영 예산 중 오프라인 사업 예산 일부 감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153천원→133천원) △20 - 서울사회협약 민관기구 운영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십 민관공동워크숍 취소 △10 · 서울사회협약이행위원회 운영 △10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5,296	5,196	△100	<p>○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사업 추진 취소로 민간위탁금의 사업비 일부 감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금(5,296백만원→5,196백만원) △100 - 사업비(3,199백만원→3,099백만원)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자치정책연구 및 홍보전파 △50 · 자치구 마을자치생태계 조성 지원 △50

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신규 감액 사업

①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협약 체결

○ 동 사업은 상호 신뢰와 수평적 관계에 기반한 “서울형 민관협력제도의 사회협약” 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사무관리비’ 1억 5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부 추진이 어려운 사업의 취소 및 축소 운영에 따라 2천만원의 예산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당초예산(A)	2020 추경예산(B)	증감(B-A)
계	(x-) 153,000	(x-) 133,000	△20,000
사무관리비	(x-) 153,000	(x-) 133,000	△20,000

〈세부 산출 내역〉

과목구분	2020년 당초예산	2020년 추경예산
사무관리비	○ 서울사회협약 민관기구 운영 = 43,000천원	○ 서울사회협약 민관기구 운영 = 23,000천원
	- 서울사회협약 리더십 민관공동워크숍 10,000,000원 * 1식 = 10,000천원	- 서울사회협약 리더십 민관공동워크숍 (취소) = 0천원
	- 서울사회협약이행위원회 운영 = 33,000천원	- 서울사회협약이행위원회 운영 = 23,000천원
	▷ 회의 참석수당 150,000원*20명*10회 = 30,000천원	▷ 회의 참석수당 100,000원*20명*10회 = 20,000천원
	▷ 회의 운영비 300,000원*10회 = 3,000천원	▷ 회의 운영비 300,000원*10회 = 3,000천원

과목구분	2020년 당초예산	2020년 추경예산
	증감사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인해 불요불급한 행사 취소 : 사회협약 민관리더십 공동워크숍 취소 (10백만원) ○'민간협의회 지원을 통한 협약안 마련' 및 '행정협의 및 검토 추진'을 코로나19로 인해 서면협의로 대체함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등 예산 일부 감액(10백만원)	

※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서울사회협약 민관기구 운영(사무관리비 4천3백만원)”, “서울사회협약이행위원회 운영(3천3백만원)”, “서울사회협약 확산(4천만원)” 등임.

○ 동 사업은 2019년 신규사업이었으며, 당초 사업의 구체성 및 상위법이나 조례상 사회협약의 근거 미흡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사업임.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적 협약 체결 사업의 문제점〉

- 첫째, 동 사업의 사회협약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고 모호함.
- 둘째, 행정권한은 ‘법정주의’를 따르므로 사회협약을 통한 민관협력은 법령상의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셋째, “사회협약추진준비위원회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법령과 조례상 근거가 선행되어야 하나, 근거가 미흡함.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020년도 동 사업의 예산 집행실적은 15.0%(224만원)이며,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서울협치협약 체결 제안 간담회(20.6.23, 서울협치협약 민간협의회) 1회를 추진하였으나, ‘서울협치협약 민간안 제안’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아 협약 체결식이 시행되지 못한 상황임.

(단위: 천원)

사 업 내 용	당초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153,000	2,242	130,758	
서울협치협약 체결	33,000	2,242	20,758	제4회 김추경 △10,000
- 사회협약민간협의회 구성 지원을 통한 민간안 마련	7,000	2,242	758	△4,000
- 서울협치협약 민간안의 행정 협의 및 검토 추진	6,000	0	6,000	△6,000
- 서울협치협약 체결식 개최	20,000	0	20,000	

서울협치협약 이행체계 구축	55,000	0	55,000	제4회 감추경 △10,000
- 민관 공동 이행 계획 수립 자문회의	10,000	0	10,000	
- 민관리더십 공동워크숍 개최	10,000	0	10,000	△10,000
- 서울협치협약 이행 성과평가 방법 개발 용역	35,000	0	35,000	
서울협치협약 인식 확산	65,000	0	65,000	
- 안내책자 제작	30,000	0	30,000	
- 홍보 콘텐츠 제작	11,000	0	11,000	
- 토론회 개최	24,000	0	24,000	

- 현재는 시민사회에서 ‘민간안’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협약에 대한 실행가능성과 이행력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에 “사회협약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용역” 사업의 추진 실적과 “협치협약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예산 및 토론회 개최” 예산의 집행실적도 전무한 상황임.
- 마련된 서울시 안(참고자료 1 참조)에 대해서도 내용이 조례로 구체화 되거나 예산 편성이 필요한 사안¹⁾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시민사회와의 협약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조례와 예산을 의결하는 의회의 권한을 경시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으로는 선언적인 내용의 협약이 어떠한 구속력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따라서, 동 사업의 목적과 실행가능성, 예산 투입 대비 서울시민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사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사업 예산 감액 요인은 없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2021회계연도 편성 예산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1) 공익활동에 대해 경력인정 등 합리적인 사회적 인정과 보수, 수당 등 적절한 보상체계를 확립

나. 2020회계연도 2회 이상 감액 사업

①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과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운영·관리

- 동 사업은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 등을 운영(시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민 제안 위주의 ‘민주주의 서울’을 서울의 공론장으로 하여 시 정책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려는 것으로,
 - 각각 ‘사무관리비’ 12억 7천 2백만원과 2억 6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으나,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오프라인 공론장과 워크숍 등의 횟수 조정 등을 위하여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2020.5.6.)시 각각 2억 5천만원과 3천만원의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추가적으로 예산액을 감액 조정(각각 사무관리비 2억원, 2천만원)하려는 것임.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예산	2020년 기정예산(A)	2020 추경예산(B)	증감(B-A)
계	(x-) 1,282,600	(x-) 1,032,600	(x-) 832,600	△200,000
사무관리비	(x-) 1,272,600	(x-) 1,022,600	(x-) 822,600	△200,000
기타보상금	(x-) 10,000	(x-) 10,000	(x-) 10,000	-

〈세부 산출 내역〉

과목구분	2020년 당초 예산	2020년 기정 예산	2020년 추경 예산
사무관리비	민주주의서울 기획 운영 = 300,000천원	민주주의서울 기획 운영 = 200,000천원	민주주의서울 기획 운영 = 200,000천원
	오프라인 공론장 개최 = 300,000천원	오프라인 공론장 개최 = 200,000천원	오프라인 공론장 개최 = 100,000천원
	시민토론 20,000,000원*10회	시민토론 20,000,000원*5회	시민토론 20,000,000원*3회

과목구분	2020년 당초 예산	2020년 기정 예산	2020년 추경 예산
	= 200,000천원 서울시가 묻습니다 20,000,000원*5회 = 100,000천원 시민제안 발굴 등 민주주의서울 추진 = 250,000천원 찾아가는 시민제안 운영 30,000,000*5회 = 150,000천원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 개최 10,000,000*10회 = 100,000천원	= 100,000천원 서울시가 묻습니다 20,000,000원*5회 = 100,000천원 시민제안 발굴 등 민주주의서울 추진 = 200,000천원 찾아가는 시민제안 운영 30,000,000*4회 = 120,000천원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 개최 10,000,000*8회 = 80,000천원	= 60,000천원 서울시가 묻습니다 20,000,000원*2회 = 40,000천원 시민제안 발굴 등 민주주의서울 추진 = 100,000천원 찾아가는 시민제안 운영 10,000,000*4회 = 40,000천원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 개최 10,000,000*6회 = 60,000천원
	증감사유		증감사유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민주주의 서울' 상반기 사업 축소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민주주의 서울' 오프라인 사업 축소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운영·관리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당초 예산	2020년 기정예산(A)	2020 추경예산(B)	증감(B-A)
계	(x-) 267,615	(x-) 237,615	(x-) 217,615	△20,000
사무관리비	(x-) 101,200	(x-) 71,200	(x-) 51,200	△20,000
공공운영비	(x-) 166,415	(x-) 166,415	(x-) 166,415	-

〈세부 산출 내역〉

과목구분	2020년 당초 예산	2020년 기정예산	2020년 추경예산
사무관리비	○ 기관협력사업 참여기관 시민참여플랫폼 활성화 운영지원 = 100,000천원 - 카드뉴스 제작 1,000,000*4회*5개 기관 = 20,000천원 -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	○ 기관협력사업 참여기관 시민참여플랫폼 활성화 운영지원 = 70,000천원 - 카드뉴스 제작 1,000,000*4회*3개기관 = 12,000천원 -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 개최	○ 기관협력사업 참여기관 시민참여플랫폼 활성화 운영지원 = 50,000천원 - 카드뉴스 제작 1,000,000*10회 = 10,000천원 - 온·오프라인 공론장 개최

과목 구분	2020년 당초 예산	2020년 기정예산	2020년 추경예산
	개최 $8,000,000 * 1회 * 5개$ 기관 = 40,000천원 오프라인 공론장 개최 $- 8,000,000 * 1회 * 5개$ 기관 = 40,000천원	$6,800,000 * 5회$ = 34,000천원 $- 오프라인 공론장 개최$ $8,000,000 * 1회 * 3개$ 기관 = 24,000천원	$8,000,000 * 5회$ = 40,000천원
증감사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응으로 기관연계사업 축소			

- 이번 예산 조정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는 토론회, 공론장 등 오프라인 행사성 사업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행사성 사업에 대한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 등에 대한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모임이나 행사성 사업 집행 부진과 축소 운영은 일정부분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으나,
 -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 개최는 당초 10회에서 지난 추경에서 8회로, 금번 추경에서 6회로 조정하였으나, 여전히 추가적인 개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오프라인 사업이 아닌 온라인 사업인 “카드뉴스 제작” 사업 등의 예산 감액 등은 적절한 예산 감액인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오프라인 행사성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핵심 사업인 “민주주의 서울” 에서의 온라인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집행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②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시민이 능동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3억 9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2020.5.6.)시 대규모 시민 참가 오프라인 행사 (협치공론장, 협치현안 정책토론회)의 축소 운영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추가적으로 ‘사무관리비’ 2천 5백만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공론장 운영(1천8백만원)”, “협치공론장 운영지원(9천5백만원)”, “협치교육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1천만원)”, “대학생 협치교양과목 운영(1천만원)”,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 운영(1억3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당초예산	2020년 기정예산(A)	2020 추경예산(B)	증감(B-A)
계	(x-) 392,920	(x-) 352,920	(x-) 327,920	△25,000
사무관리비	(x-) 382,920	(x-) 342,920	(x-) 317,920	△25,0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x-) 10,000	(x-) 10,000	(x-) 10,000	-

〈세부 산출 내역〉

과목구분	2020년 당초예산	2020년 기정예산	2020년 추경예산
사무 관리비	○ 협치체계구축 = 199,300천원 - 협치공론장 운영지원 = 95,000천원 ▷ 공론장 운영 9,500,000원*10개	○ 협치체계구축 = 159,300천원 - 협치공론장 운영지원 = 65,000천원 ▷ 공론장 운영 15,000,000원*3개 공론장	협치체계구축 = 134,300천원 협치공론장 운영지원 = 65,000천원 공론장 운영 15,000,000원*3개 공론장

과목구분	2020년 당초예산	2020년 기정예산	2020년 추경예산
	공론장 = 95,000천원 - 협치사업 시민 대토론회 개최 등 = 25,000천원 ▷ 협치현안 정책토론회 개최 5,000,000원*5개분 야 = 25,000천원	= 45,000천원 ▷ 정책제안 공유회 2,000,000원*1회 = 20,000천원 - 협치사업 시민 대토론회 개최 등 = 15,000천원	= 45,000천원 정책제안 공유회 2,000,000원*1회 = 20,000천원 협치사업 시민 대토론회 개최 등 = 15,000천원
		▷ 공론장 운영 6,000,000원*3회 = 18,000천원 ▷ 분과위원회 운영 수당 165,000원*10명*12회 = 19,800천원 ▷ 실태조사 등 조사 용역비 30,000,000원*1회 = 30,000천원	공론장 운영 8,000,000원*1회 = 8,000천원 분과위원회 운영 수당 165,000원*10명*12회 = 19,800천원 실태조사 등 조사 용역비 15,000,000원*1회 = 15,000천원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대규모 시민 참가 오프라 인 사업 행사(협치공론 장, 협치현안 정책토론 회) 축소 운영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축소로 일부 예산 감액	

- 감액 주요 내역은 공론장 운영을 3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실태조사 등 용역비를 감액조정하려는 것임.
-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사업에는 동 사업을 포함하여 사업 별로 오프라인 공론장 등의 사업이 많고, 동 사업에도 지역협치 역량 강화 교육, 협치현안 정책토론회 등의 사업이 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향후 사업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에 대하여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③ 서울시NPO 지원센터 운영

- 동 사업은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발전과 민관협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서울시 NPO 지원센터” 운영 예산 24억 8천 3백만원(민간위탁금)을 편성하였으나,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2020.5.6.)시 ‘인건비’와 상반기 추진이 어려운 사업의 취소 및 축소 운영에 따라 4천 2백만원(인건비 1천1백만원, 국외여비 2천5백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활동가 기술공유 지원 사업” 전액 감액(7백만원) 등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감액(4천 8백만원) 조정하려는 것임.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당초예산	2020년 기정예산(A)	2020 추경예산(B)	증감 (A-B)
계	(x-) 2,493,147	(x-) 2,451,174	(x-) 2,403,144	Δ48,030
사무관리비	(x-) 10,000	(x-) 10,000	(x-) 10,000	-
민간위탁금	(x-) 2,483,147	(x-) 2,441,174	(x-) 2,393,144	Δ48,030

〈세부 산출 내역〉

구분	2020년 당초예산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	증감액 (기정예산 대비)	감추경 세부 산출내역
합계	2,483,147	2,441,174 (Δ41,973)	2,393,144 (Δ48,030)	Δ48,030	
합계	2,483,147	2,441,174 (Δ41,973)	2,393,144 (Δ48,030)	Δ48,030	
인건비	823,955	812,985 (Δ10,970)	812,985		

구분	2020년 당초예산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	증감액 (기정예산 대비)	감추경 세부 산출내역
운영비	446,582	446,582	446,582		
사업비	1,212,610	1,181,607 (Δ31,003)	1,133,577 (Δ48,030)	Δ48,030	
-NPO 변화지원	405,000	399,150 (Δ5,850)	392,120 (Δ7,030)	Δ7,030	
▷ 조직 변화지원	100,000	100,000	100,000		
▷ 마영리 스타트업지원	100,000	100,000	100,000		
▷ 활동가 역량강화지원	125,000	125,000	117,970 (Δ7,030)	Δ7,030	- 활동의 기술발굴 및 공유지원사업 취소 Δ7,030천원
▷ NPO 참여예산제	80,000	74,150 (Δ5,850)	74,150		
-공익생태 계활성화	485,600	485,560	313,600 (Δ172,000)	Δ172,000	
▷ NPO 지원박람회	250,000	250,000	214,000 (Δ36,000)	Δ36,000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전환으로 따른 대관비 Δ36,000천원
▷ NPO 공동사무국	92,000	92,000	92,000		
▷ 대외협력	36,100	36,100	31,100 (Δ5,000)	Δ5,000	- 공동협력사업 축소진행 Δ5,000천원
▷ 관내차구 NPO지원체계 개편성	107,500	107,500	107,500		
-공익활동 기반조성	322,010	296,857 (Δ25,153)	296,857		
▷ 정책연구	101,280	76,127 (Δ25,153)	76,127		
▷ 홍보	60,000	60,000	60,000		
▷ 정보 아카이브	61,630	61,630	61,630		
▷ 공익활동 거점공간 조성	99,100	99,100	99,100		

- 주요 감액 사유로는 “활동의 기술발굴 및 공유 지원사업” 취소(7백만원), 대외협력 사업 중 공동협력사업 축소(5백만원) 등이나, 동 사업의 취소와 축소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인지, 사업의 준비 미흡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2020년도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5월 31일 기준 집행률은 23.1%였으며, 7월 31일 기준 집행률은 32.4%로,
 - “정책연구”(4.1%), “홍보”(23.3%) 등 코로나 19의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들도 집행실적이 과도하게 부진한 것은 아닌지 여부와 함께 추가적인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NPO지원박람회” 사업은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률은 0.5%(1백만원) 수준임에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3천6백만원의 임차료만 감액하고 있는바,
 - 코로나 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행사의 추진이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와 함께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인 경우 감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0년 서울시 NPO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2020.7.31.기준,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집행률 (%)
총계		1,181,607	382,490	799,117	32.4
NPO 변화 지원	조직변화지원사업	100,000	73,848	26,152	73.8
	비영리스타트업지원사업	100,000	52,147	47,853	52.1
	활동가역량강화지원	125,000	65,703	59,297	52.6
	NPO참여예산제	74,150	37,342	36,808	50.4
공익	NPO지원박람회	250,000	1,170	248,830	0.5

생태계 활성화	NPO공동사무국	92,000	12,655	79,345	13.8
	대의협력	36,100	4,108	31,992	11.4
	권역자치구NPO지원체계 기반조성	107,500	57,193	50,307	53.2
공익 활동 기반 조성	정책연구	76,127	3,092	73,035	4.1
	홍보	60,000	13,957	46,043	23.3
	정보아카이브	61,630	13,805	47,825	22.4
	공익활동 거점공간 조성	99,100	47,470	51,630	47.9

④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 동 사업은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사업(마을공동체 정책지원연구, 마을공동체 활동가 역량강화, 자치구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지원, 서울형 커뮤니티거점 활성화 사업, 동단위 자치생태계 조성지원 등을 위한 사업)의 민간위탁을 위해 54억 9천 6백만원의 예산(민간위탁금)을 편성하였으나,
 -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2020.5.6.)시 현장지원 사업 감소, 지역교류 지원 축소 등에 따른 사업비 감액 등 총 2억원의 민간위탁금을 감액 조정 하였으며,
 -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사업 추진 취소 등으로 민간위탁금 1억원을 추가적으로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당초예산	2020년 기정예산(A)	2020 추경예산(B)	증감(B-A)
계	(x-) 5,496,358	(x-) 5,296,358	(x-) 5,196,358	(x-) △100,000
민간위탁금	(x-) 5,496,358	(x-) 5,296,358	(x-) 5,196,358	(x-) △100,000

〈세부 산출 내역〉

과목 구분	2020년 당초예산	2020년 기정예산	2020 추경예산
민간위탁 금	인건비 = 1,652,422천원	인건비 = 1,652,422천원	○ 인건비 = 1,652,422천원
	운영비 = 494,970천원	운영비 = 444,970천원	○ 운영비 = 444,970천원
	사업비 = 3,348,966천원	사업비 = 3,198,966천원	○ 사업비 = 3,098,966천원
	마을자치정책연구 및 홍보전과 = 653,446천원	마을자치정책연구 및 홍보전과 = 603,446천원	- 마을자치정책연구 및 홍보전과 = 553,446천원
	마을활동가 교육 및 지원체계 구축 = 365,000천원	마을활동가 교육 및 지원체계 구축 = 305,000천원	- 마을활동가 교육 및 지원체계 구축 = 305,000천원
자치구 마을자치생태계 조성 지원 = 1,486,520천원	자치구 마을자치생태계 조성지원 = 1,446,520천원	- 자치구 마을자치생태계 조성지원 = 1,396,520천원	
서울형 커뮤니티 활성화 = 844,000천원	서울형 커뮤니티 활성화 = 844,000천원	- 서울형 커뮤니티 활성화 = 844,000천원	
증감사유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 운영 등으로 운영비 일부 감액 현장지원사업 추진 감소로 마을자치 정책연구 및 홍보전과 (대외협력 연계망 분야), 마을활동가 교육 및 지원체계구축(마을실천대학분야, 지역교육지원 분야),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마을자치아카이브 구축분야) 일부 감액		현장지원사업 추진 감소로 마을자치 정책연구 및 홍보전과(마을공동체 주민자치연구분야, 대외 홍보 지원 및 확산분야),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마을자치조성지원분야, 전문인력 교육 개발 및 운영분야) 일부 감액

- 금번 감액 조정 사유로는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연구” 4천만원, “대외 홍보 지원 및 확산” 1천만원, “주민자치 실무자 직무교육 및 주민자치 강사양성과정” 2천만원 등이나, 감액 사유로 제시한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 향후 “주민자치 실무자 직무교육 및 주민자치 강사양성과정” 사업은 무조건 취소 및 축소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동 센터의 2020년도 사업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마을활동가 인정체계 개발” 사업의 집행률은 전무하며, “교육기반조성” 사업은 0.6%, “대외 홍보 지원 및 확산” 사업은 2.9%, “연구관리 및 지원” 사업은 6.0%로, 집행 실적 부진 사업이 과도한 바, 추가적인 예산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수탁기관의 추진 사업 분야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있고, 그에 따른 예산의 과다 편성 사항은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한 내실있는 실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0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감추경 세부 산출내역>

(2020.7.31.기준,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당초예산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	증감액 (기정예산 대비)	감추경 세부 산출내역
합계	5,496,358	5,296,358	5,196,358	△100,000	
인건비	1,652,422	1,652,422	1,652,422	-	
운영비	494,970	444,970 (△50,000)	444,970	-	
사업비	3,348,966	3,198,966 (△150,000)	3,098,966	△100,000	
마을자치 정책연구 및 홍보전파	653,446	603,446 (△50,000)	553,446	△50,000	○ 마을공동체주민자치연구△40,000천원 - 성과연구 △40,000천원*1식 ○ 대외 홍보 지원 및 확산 △10,000천원 - 마을공동체 공유가치 나눔사업 △10,000천원*1식
마을활동가 교육 및 자원체계 구축	365,000	305,000 (△60,000)	305,000	-	
자치구 마을자치	1,486,520	1,446,520 (△40,000)	1,396,520	△50,000	○ 마을자치조성지원 △30,000천원 - 마을자치 시구민관협력지원

생태계 조성지원					△30,000천원*1식 ○전문인력 교육 개발 및 운영 △20,000천원 - 주민자치 실무자 직무교육 △11,000천원*1식 - 주민자치 강사양성과정 △9,000천원*1식
서울형 커뮤니티 활성화	844,000	844,000 (-)	844,000	-	

전문위원 : 김태한
입법조사관 : 신정희

참고 자료 1

시민의 정부로 향해가는 서울협치협약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협치의 약속-

서울특별시 / 서울협치협약민간협의회(준)

시민사회와 서울시가 함께 만드는 시민민주주의

서울시와 시민사회는 서울협치협약을 통해 시민자치와 협치의 제도적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시정의 주인으로 행정에 적극 참여·숙의·협력하는 시민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서울시는 모든 시민에게 정책참여의 실질적 기회와 공정한 절차를 보장한다.

서울시는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전제로 한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통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만드는데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서울시는 시민사회의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정책 결정 및 실행에 더욱 깊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와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사회에 대한 행, 재정적인 지원이나 협력과 관계없이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시민사회는 시민과 함께 서울시의 정책 제안·심의·결정·평가 과정에 참여한다.

시민사회는 서울시와 협력하는 것이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효과적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공공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등 서울시와의 협력에 있어 견지해야 할 시민에 대한 책임을 이행한다.

서울협치협약은 '시민사회와 서울시가 함께 만드는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다음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① 서울시-시민사회 간 신뢰와 협력의 동반자 관계 확립

서울시와 시민사회 간 신뢰와 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민사회가 공공정책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정책적 환경을 마련하고, 시민사회는 공공정책의 동반자로서 적극적 참여와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한다.

② 공공정책의 품질 향상과 이를 위한 협력적 정책공동생산체제 구축

협력적 정책공동생산체제는 서울시와 시민사회가 정책 및 행정 서비스의 계획, 결정, 집행,

평가의 전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협력적 정책공동생산체제는 시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시민 요구가 반영된 문제해결력이 높은 정책을 생산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서울시와 시민사회는 협력적 정책공동생산체제 구축을 위해 시민사회의 정책 참여와 협력을 제도화하고 규범화하며, 참여와 협력을 제한하는 장애요소를 제거한다.

③ 지역사회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을 향한 분권과 자치 실현

서울시와 시민사회는 모든 시정 정책이 시민의 삶에 직결된 지역사회의 구체적 문제 해결을 지향하도록 하고, 생활권 단위까지 주민의 공적 활동 참여 기회와 결정 권한을 확대하며, 주민자치 조직의 자립기반을 마련과 안정적인 자치생태계 조성한다.

서울시와 시민사회는 서울협치협약의 이행을 위해 다음 원칙을 확인한다.

- ① 서울협치협약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의 이행 및 점검체제를 구성, 운영한다.
- ② 서울협치협약 이행 결과와 성과를 상호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한다.
- ③ 서울협치협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현행 법률이나 조례의 개선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한다.

서울시와 시민사회는 서울협치협약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아래 의제에 대한 공동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그 이행에 대해 약속한다.

1. 개방·참여·숙의를 촉진하는 제도혁신

서울시와 시민사회는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력문화를 서울시정책 전반에 확산하고, 시민사회와 상호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 하며, 공공정책의 수립과 실행절차에 시민의 참여와 숙의를 촉진하는 제도혁신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1.1 서울시는 예산을 편성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시민, 시민사회 주체들의 참여와 숙의를 제도화한다.

시민사회는 서울시의 예산 편성 절차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지 감시하고, 시민의 수요와 의견이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1.2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다양한 사회의제와 현안을 발굴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숙의 제도와 절차를 확립한다.

시민사회는 공론·숙의 과정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촉진자·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공론장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3 서울시는 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와의 상시적 정책협의 기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

시민사회는 서울시와의 정책협약에 참여하는 경우, 정책분야와 지역사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지역사회 수요,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며, 문제해결 관점에서 책임 있는 태도로 주도적 역할을 다한다.

2.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정책공동생산

서울시와 시민사회는 정책공동생산을 촉진하는 민간위탁제도, 민간보조사업, 지방계약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서울시와 시민사회가 정책 생산과 운영의 동반자임을 인정하고 신뢰와 협력을 활성화한다.

2.1 서울시는 민간위탁제와 민간보조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이나 보조사업자가 전문성과 자기책임성에 입각해 자율적, 창의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고, 이

를 협약서에 명시하거나 공동 운영지침을 작성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시민사회는 서울시 민간위탁제와 민간보조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의 목표, 내용, 성과 등 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 이해당사자 시민이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개방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한다.

2.2 서울시는 민간위탁제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 방법과 절차에 대해 수탁기관, 보조사업자와의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성과와 협치역량을 균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시민사회는 민간위탁제와 민간보조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정책사업이 목적하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행정과 상호협의를 원칙에 따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2.3 서울시는 민간위탁제와 민간보조사업 등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불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상시적인 조사와 모니터링, 그리고 제도 개선을 이행하며, 상호 인정할만한 불합리한 요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해결조치를 모색한다.

시민사회는 민간위탁제와 민간보조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금전적·비금전적 차원의 부정·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구적 노력을 강구하고, 구성원들의 노동안정성 보장과 근로여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3.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촉진

서울시와 시민사회는 사회문제 해결의 동반자이자 정책의 공동생산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존재가치와 역할을 인정하며, 시민사회의 기반과 역량을 강화하고 활력 있는 시민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3.1 서울시는 공익활동의 촉진과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시민사회발전기금의 설치와 공유재산을 활용한 시민자산화 등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자립적 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사회의 자원을 발굴, 모집, 연계, 활용하기 위한 자구적인 계획을 마련한다.

3.2 서울시는 공익활동에 대해 경력인정 등 합리적인 사회적 인정과 보수, 수당 등 적절한 보상체계를 확립한다.

시민사회는 공익활동에 대한 공정한 인정과 보상 체계 확립을 위한 원칙을 서울시와 함께

마련하며,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제공한다.

3.3 서울시는 공익활동가의 교육·훈련, 보조·지원 위한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시민사회는 역량 있는 공익활동가들을 적극 발굴하고 활동에 필요한 안정적 여건을 보장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분권과 주민자치가 살아나는 지역사회

서울시와 시민사회는 주민 주도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도록 지역사회로의 분권과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각적 정책지원과 실천방안을 마련한다.

- 서울시는 지역사회 기반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상향적 정책기획 절차와 상시적 정책협의기구 운영을 활성화 하고, 지역사회에서 실행되는 자치와 협치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효과제고를 위해 재정분권을 강화한다.

시민사회는 지역주민이 공익활동과 정책과정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시민사회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다.